

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민간통일운동의 과제

황인성

기독교사회연구원 연구실장 · 前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1. 남북 정상의 만남,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

지난 6월 13일부터 2박 3일간 약수로 만나 서로 껴안으며 헤어질 때까지 남북정상의 평양상봉과 회담은 7천만 동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국 우리는 누가 무어라 해도 하나의 민족, 피를 나눈 한 거래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가슴으로 뜯겁게 느꼈고, 국제적인 외교관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파격의 연속, 기대 이상의 합의도출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반도 분단현상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였던 것이다.

지난 4월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 속에서 이를 반기면서도 일말의 불안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서 지금도 서로 쟁부리를 마주하고 있는 남과 북의 정상들이 무릎을 맞대고 회담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새로운

화해의 시작으로 이해하기에 족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남북 당국간에는 합의가 잘 실천되지 않았다는 점, 남북 관계의 정략적 악용 가능성, 또 북한은 예측하기 힘든 상대라는 고정관념 등으로 과연 정상회담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또 열린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한민족의 분단사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곧 이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대결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성공한 것이다.

2. 1차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

반세기 이상 불신과 적대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분단현실을 감안하면, 얹힌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렇다면, 남북당국의 최고책임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한 자리에서는 현안 해결에 앞서, 무엇보다 상호신뢰의 확보와 통일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1차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그 위상에 걸맞은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된다. 회담의 결과를 집약하고 있는 공동선언문은 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과 공동지향, ③ 이산 가족 가족·친척방문단 교환,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노력, ④ 제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⑤ 이의 추진을 위한 당국간 대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합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와 정중히 남쪽의 대통령을 맞이하고, 모든 문제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점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발표된 남북최고책임자 간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합의들에 비해 실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 당국의 고위 책임자들간의 친교와 상대방의 관심사항에 대한 인식과 정상회담 개최 합의 과정에서의 남북 주도성 등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던 남북관계가 협력적 공존의 바탕 위에서 통일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또 되게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주도적 계기 마련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에 애초에 합의되었다고 중간 발표되었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빠지게 된 것은 그 전말을 알기 힘들긴 하지만,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국제적 역학과 정치군사문제의 예민함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동시에 화해협력의 심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이번 1차 정상회담이 넘긴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상호간에 실체를 인정하고, 흡수통일도 적화통일도 배제한 바탕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통일을 기약했다는 점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평화시대를 여는 역사적 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남북의 공동노력 여하에 따라 북·미·북·일 관계의 진전, 동북아 질서의 다자화를 이끌어 냄 수 있게 되었더는 점에서도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의 작은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민간 통일운동의 향후 과제

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우리는 평화와 통일시대로 진입하는 면 도정의 첫 걸음을 떼고 있다.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

분단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안팎의 냉전세력들의 간섭과 내부 역풍을 막아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흐름이 동요 없이 확대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도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평화·통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고,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주변국가들의 예민한 반응과 신속한 외교적 행보를 보면서, 남북문제의 복합적 성격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분단현실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는 길이란 냉정하게 말하면, 현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길이라는 점에서 내외에 걸쳐 관련세력간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추상적 원칙에 대한 공감은 쉽지만,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는 상당한 차이와 갈등이 예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통일과정과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실질적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기층 대중의 관심과 참여는 올바른 통일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이다.

분단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안팎의 냉전세력들의 간섭과 내부 역풍을 막아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흐름이 동요 없이 확대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도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평화·통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노력에 대한 감시의 중요성

그간의 남북관계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보다 말에 비해 실천이 적었던다는 점이다. 주변 정세의 변화나 당국간의 상호 필요에 따라 회담이 개최되고 일정한 합의에 이르렀으나, 곧이어 합의문은 휴지조각이 되어 민족구성원의 기대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작은 합의라도 성실히 이행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당국사이에 합의한 사안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는 것은 가장 일차적인 민간차원의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 대화와 화해 무드의 확산, 한반도 문제 해결의 민족주도성 강화, 안정적 남북관계의 발전 등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으로 이어지는 2차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매우 긴요한 사안이다. 당국차원에서도 서로 신의 있는 합의이행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민간차원에서도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중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울정상회담이 또 한번의 민족적 감동을 증폭시키고,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자주적 해결역량을 과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냉전적 법제도의 칭산과 통일에 대한 대중적 합의기반 조성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 내부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시대의 법률과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냉전체제와 독재정권 하에서 갈들여지고 주입된 맹목적인 민족적대의식과 불신감을 털어 내고, 참다운 평화·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번에 남한 사회가 경험한 "김정일 쇼크" 역시 따지고 보면, 그 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왜곡된 대북 인식의 여파라고 볼 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볼 수 있는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에서 언론,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는 주장만으로도 구속을 감수해야 했던 상황에서, 두 정상이 국가연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키로 한 것은 국민대중 사이에서 실질적인 통일논의의 확산을 가능케 하고 있다. 어느 일방의 통일방안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오늘의 현실과 민족적 이익을 감안하여 올바로 통일에 이를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인지를 합리적으로 토론하

여 민족적 단결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체택과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정치세력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상호주의 원칙을 불필요하게 강조하고 나서는 것 등을 볼 때, 남북문제의 해결 과정이 민족 전체의 이해보다는 협소한 정파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다수 대중의 여론과 힘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축소 노력

분단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대치에 따른 전쟁위협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기에 평화 없이 통일 없고, 또 통일 없이 영속적 평화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전쟁을 실질적으로 종식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주한 미군의 문제를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동북아 지역평화 실현이라는 요구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 주한 미군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 주장하든 간에 현실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적대관계에 있고, 북한이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냉전시기, 특히 전쟁상황이라는 비상상황 하에서 주둔하게 된 미군의 지위 문제를 비롯하여 철수 여부를 국민적으로 다시금 냉정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냉전시기의 진영대결의 잔재인 북미·북·일 관계가 정상화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전체의 평화질서를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남북간에는 즉각적으로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점차로 군비를 축소해 감으로써 민중복지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이 투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과 북이 접근하면서 오히려 남과 북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민족의 단결과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며, 외세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매일 것이 아니라 민족이 단결하여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가야 한다는 민족자주의 의지를 더욱 가다듬어야 될 때라고 생각된다. ♦